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오 제 직

다시 다가서는 중국을 보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유대를 맺어왔다. 육로를 통한다면 평안도를 경유하겠지만, 바닷길 또한 중요한 교통로였다.

특히 남중국과 교류할 때는 황해를 통한 바닷길이 많이 이용되었다.

당나라와의 교역 전진기지였던 당진포(唐津浦)는 바로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당진포 외에도 내포 해안에는 과거 중국과의 교류를 입증해주는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해미 대터고개에 있었던 안흥정(安興亭)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던 객관(客館)이었다. 자료에는 남송(南宋)의 사신 서경(徐兢)이 황해를 건너 내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의 항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황해를 통한 양국간의 문물 교류는 대한제국 때까지 활발히 이어졌다. 서산에 형성되었던 차이나타운은 이러한 시점을 말해주는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로 중국과의 교류는 중단되었고, 중국은 한때 우리에게 잊혀진 대륙으로 남아 있었다.

1억의 중국 관광객

그렇지만, 역사는 다시 반전되어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기회의 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이미 대세가 되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의 영

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인천은 대 중국의 관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98년 중국 정부는 한국을 국외여행 자유국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 내부에 연예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韓流) 열풍이 일면서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관광객 대부분은 인천공항 또는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동대문시장, 에버랜드, 용인 민속촌 등을 방문하고 부산, 경주와 제주도를 경유하는 것이 중국관광객의 가장 일반적인 코스이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편의시설, 그리고 쇼핑·오락 등이 대부분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의 축(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여타의 지역은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관광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충남의 경우 아산온천, 보령,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이다.

세계관광기구(WTO)는 중국인의 해외여행객이 한 해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방문객의 비율 또한 연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중국과의 교류창구였던 충남 서해안, 내포(內浦)의 잠재력에 눈을 돌

려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내포 해안을 관광교류의 창구로

내포는 백제이래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통하던 관문이었다. 태안·서산·예산 등지의 마애불은 남중국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다. 이제 다시 중국과의 근접성, 그리고 당진항이라는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중국관광객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포에서 시작하여 백제의 고도인 공주·부여를 연계시키는 관광코스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령, 안면도, 아산 등의 기반여건을 활용하고, 삼교호 함상박물관, 대천 해수욕장, 안면도, 천수만, 금강 하구언 등지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금산 인삼, 보령 머드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서해안시대에 상응하는 전략 가운데에는 이처럼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한 교류의 확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에게 친숙한 충청남도 건설은 이제 우리 앞에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충청권의 발전전략

지금까지 신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그것의 건설 필요성과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역설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한 나라의 수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명분이 분명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와 시민들은 여러 과정을 통해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필자 또한 동의하면서, 지금부터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고 다양한 신행정수도 건설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은 신행정수도의 위치, 도시규모, 건설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경우여나 인구·공간구조·지역경제·주민의식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수도권 인구는 38~122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에, 충청권의 인구는 48~156만 명이 증가하고, 일자리는 최소 8만 3천 개에서 27만 개 정도가 증가하며, 생산유발효과는 투자비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1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효과 외에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과 같은 간접효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중추기능의 충청권 이전에 따라 행정수도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중소도

시들의 긍정적 기능 변화도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주변 중소도시들의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신행정수도로 기능이 역류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의 소외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서울 최고주의'를 극복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 완화, 지역주민의 자긍심 증대, 주민생활편의 및 복지증진, 교육의 양적·질적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 자치단체·주민들간의 소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연될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야기되어 건설계획의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각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우리는 착실하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만 한다.

첫째, 충청권을 또 하나의 국토핵심 공간으로 상정하고, 타 지역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토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市·道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속간선망 체계를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방사환상형 광역교통체계로 재편하고, 신행정수도와 연결되는 고속간선망의 건설시기를 행정수도 건설시기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서해안 각 항만은 지역항의 기능에서 벗어나 행정수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대중국 교역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청주국제공항이 실질적인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정부축과 서해안,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해안의 개발거점을 육성하여야 하며,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 성장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통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지역대학에 대한 수요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기존 정부축의 가속적인 발전과 서해안 개발이 기대되지만, 내륙지역의 경우는 행정수도로의 기능 흡수 등으로 인한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신행정수도로 이전되겠지만, 그 이외의 충청권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용태세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도시 개발, 관광·교통, 국방, 교육, 과학, 역사문화, 농업, 의학, 생명관련 기관 등을 충청권 이전 가능기관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지금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충청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교육위기, 이대로는 안된다

얼마 전에 어느 초등학생이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일기를 남기고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 청소년들이 많은 눈동자를 지니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어린 나이에, 학교와 학원의 과중한 학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결한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현상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다. 어려서부터 모두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학생 중에는 목숨을 끊거나 정신 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참담한 학교 현실을 보며

이런 피 말리는 경쟁은 과연 청소년 학생들이나 나라에 정말로 이익이 되고 의미 있는 현상인가?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과연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장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붕괴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듯 하다. 더욱이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1위로서 엄청난 고비용 교육비를 부담하지만 그 효율성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더 이상

학교 교육을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다. 이제, 모두 함께 나서서 현재의 교육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민의 지혜와 협조를 모아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였다. 그 결과 수 만 명의 교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은퇴시켰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되었다.

경험이 풍부한 원로 교원을 교단에서 추방하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원을 더 많이 채용한다는 장미빛 목표는 초등교사의 부족현상과 함께 교육의 현장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이것은 몇 사람의 탁상 행정식 개혁정책이 얼마나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교훈이다.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처방

첫째,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증가하는 일이다.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의 감축,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보수 상향 조정,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총생산의 10%가 교육에 투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산은 유능한 인력뿐이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축 자금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마다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구성원들의 자율과 역량을 신장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간의 권한 배분은 가능한 한 '위임'이나 '위탁'보다는 '이양'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큰 기본만 제시하면서 가능한 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학교장 중심으로 그 학교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그 결과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점점 상향적으로, 나아가 폭넓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상급기관의 장은 하급 단위기관장이 해야 할 몫을 절대로 빼앗지 말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보호 육

성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각 단위세포가 활성화 될 때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각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들이 일체가 될 때 교단은 안정되고 21세기에 맞는 인간 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탈바꿈 속에서 우리의 학교는 학생들이 찾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사가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학교 모습이다.

셋째,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 수행이다.

학벌위주, 연고주의, 성차별 등에 따른 후진성 관행 조직문화를 과감히 타파하고, 정부, 국영기업체, 사기업체 간의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국민의식의 일대 변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언론과 홍보매체가 전력투구하는 일이다. 또한 사법, 행정시험과 같은 암기 위주의 인재선발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대부분 선진국이 실행하고 있는 능력과 기능위주의 다양한 선발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대학입시의 획기적 개선이다.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 학교별로 특별전형 확대, 수시모집, 수능 영역별 성적 차등 적용,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직업탐구영역 우대 등 다양한 선발방식을 확대 정착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입시출제 범위는 "국정교과 내에서만 출제"하고 출제위원은 "지방 중·고교 교사와 지방대학 교수 중심"으로 선정하고 입시 후에는 대학별 학과별 커트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끝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그 초기부터 대통령 산하에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교육 전반을 다루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용두사미 격으로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부터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그 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이와 같은 교육정책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